여수~서울 KTX 2011년 개통

국토해양부,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화 등 간선 철도 확충에 1조4천억 투자

2011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에서 여수까지 고속열차(KTX)를 타고 갈 수 있게 된다. KTX를 이용하면 현재 새마을호로 5시간10분가량 걸리던 것이 3시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국가행사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 KTX 여수노선 개통을 위해 올해 전라선 익산~순천~여수 복선 전철(194.2㎞),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화(10.9㎞)에 모두 2천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 1조4천428억원을 들여 2011년 상반기까지 전라선을 모두 복선화한 뒤 한국형 KTX 열차를 투입해 호남 지역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간선철도의 신설, 개량, 복선전철화 등 전라선 복선화를 포함한 31개 사업에 올해 모두 1조 4천178억원을 투자하는 등 간선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개통하는 구간으로는 장항선 천안~온양온천~신창간 복선전철(22.2km), 장항선 신창~대야간 개량(92.7km), 중앙선 팔당~신원 구간(13.0km) 등 총 128km이다.

이에 따라 천안, 팔당까지 운행 중인 수도권 전동차가 각각 아산시 신창 및 양평군 신원까지 연장 운행됨으로써, 충청 서부지역 및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앙선은 앞으로 2009년 용문까지 복선전철화를 완료해 수도권 전철을 연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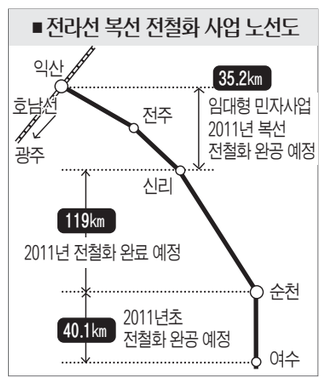
또 마산, 진주권 KTX 운행을 위한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101.4km) 사업에도 2천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전철의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64.2km)과 인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간 20.7km)의 조기개통을 위해 2천660억원이 투자되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53.7km)도 587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촉진한다.

국가철도망의 확충 및 물류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들도 추진된다. 동해축의 포항~삼척간 철도신설사업(165.8km)은 지난 3월 착공했으며, 울산~포항간 복선전철(73.2km)은 실시설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착공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승(평택항)~평택역간 산업철도(27.0km)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11.0km) 외 3개 사업은 설계를 시행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노선도



광주고검 사랑 봉사단 발족

광주고등검찰청은 16일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사랑봉사단 발족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는 이준보 광주고검장과 봉사단원·김양균 변호사·학교법인 송원학원 고제철 이사장·광주여성단체협의회·광주YMCA·광주YWCA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복 증정, 다짐문 낭독,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봉사단원들은 또 단체헌혈 뒤 광주시 동구 용산동의 아동 양육시설인 영신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 봉사단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감찰담당검사를 감사, 총무과장을 운영팀장으로 하며 매월 840계좌(계좌당 1천원)를 통해 84만원의 기금을 모아 자원봉사 활동에 쓸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

한화, 여수에 1,712억 들여 공장 건립

전남도, 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도

전남도가 16일 한화석유화학㈜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와 업무협약을 했다.

도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이야트 호텔에서 한화석유화학㈜과 여수 국가산단 1만3천600㎡에 1천712억원을 들여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화는 이번 투자를 통해 가성소다, 염소, PVC 원료인 염화에틸렌 생산설비 능력을 갖춘다.

도는 또 같은 장소에서 EUCCK와 합동으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교사절 등 60여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이날 EUCCK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기업과의 네트워킹 구축과 품질 높은 투자정보 획득이 가능하게 됐고 EUCCK의 외국 현지사무소를 활용해 외국의 기업투자 계획 및 해외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투자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설명회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으로 전남의 투자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외국인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에 돈이 될만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국토부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계획 추진

광주·전남 발전 '치명타'

투자 협약 기업들 수도권 U턴 불보 듯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정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 마련에 나서면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심화와 지역 경제발전 저해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국토종합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규모 축소는 물론 기업 및 민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성장의 기반을 닦은 호남이 이명박 정부에서 도약의 기회를 잃으면서 과거의 '호남 낙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가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을 수정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성장 억제 방향으로 짜인 기존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풀어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5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태여서 백지화는 어렵다고 보고 '5+2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광주시·전남도의 기업 유치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한층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와 기업이전 등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도 이전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현재 서울의 아구스(주) 등 수도권 첨단기업들과 공장건설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국내 70여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투자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투자여건이나 물류 등에서 광주보다 뛰어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점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강신기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회생 조짐을 보이는 지역경제를 빈사상태에 빠뜨릴 것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내달 1일부터…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받아야

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택시에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폐지되는 대신 개별소비세·교육세에 대한 면세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6일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로 마티즈(796cc), 모닝(999cc), 다마스(789cc) 등이 해당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할 때 ℓ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준다. 환급 세액은 연간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현재 세율은 ℓ당 휘발유 472원, 경유 335원이고 LPG는 kg당 252원이다.

/연합뉴스

자동차 통행 총량제 내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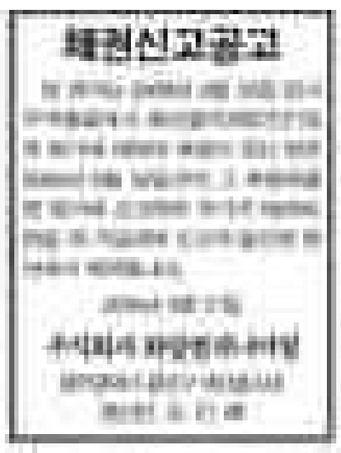
이르면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 총량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한국이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인 통행량 조절을 통해 온실 가스를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 등 3개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 환경지속 가능성 관리지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사기 당할것이 앞으로도…